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2면

가자 학살 3년
국제 공동 행동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한계
계속 드러내는 이란 전쟁
4면

‘내란세력’과
그 ‘방패’
조희대
9면

브라질
대선
10면

임신중지약:
개혁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11면

DMZ 지뢰
폭발 사고
12면



시온주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5~8면

가자 학살 3년

10-11

국제 공동 행동

10월 11일(일) 오후 2시 | 서울 영풍문고 본점 앞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종각역 5번 출구)

함께 하자

3면을 읽으시오



북한군 포로 한국행이 드러낸 이재명 식 줄타기 외교의 취약성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은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관련 비밀 유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 유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그들은 북한 경찰총국 소속 병사였다. 북한 국가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온 노동계급의 일원이자, 미국 등 서방이 지원하는 대리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벌이는 제국주의 간 전쟁의 희생양이다. 이들은 일찍이 언론을 통해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혔다(2025년 1월 27일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방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당연히 이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비공개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의힘(국힘)의 대정부 공세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면(진보당처럼)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외교를 반대하는 것은 오래된 좌파 원칙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감한 쟁점 하나인 포로 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됐다.

젤렌스키와 이재명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합의한 것은 인도주의와 무관하다.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듯이, 포로의 교환·석방·송환은 (인도적 의무로 가장할 때조차)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군사적 필요성, 외교 협상에 철저히 종속된다.

무기 지원 압박 카드

북한군 포로 문제는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과 젤렌스키가 만났을 때 핵심 의제의 하나였다.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과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맞바꾸고 싶어 했다. 그래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석방하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재명과 젤렌스키는 이미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

8월 들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이 쇄도했다. 8월 9일 젤렌스키는 한국 방공 시스템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8월 23일 미국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한국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우크라이나·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얼마 뒤 트럼프는 한국의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쓴)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 무렵 국내 우파 언론도 북·러 밀착 가속화(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 등)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하원, 8월 12일 자).

사실 이재명 정부는 그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틈바구니에서 한국 지배계급이 제국주의 시스템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이 보유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과 그 대안

으로 천궁-II 제공을 검토한 바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선뜻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재는 듯 하자, 젤렌스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한국을 포로 문제라는 민감한 쟁점에서 이해당사자 지위에 올려 무기 지원을 압박한 것이다.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사실만 공개한 게 아니다. 그는 북한의 참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서방(그러나 한국도)의 전쟁 개입 수위를 극대화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한편, 이재명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을 정치 위기 돌파에 이용하고 싶어 했던 듯하다. “국정 지지율 만화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습니까?”

문제는 공개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은 “외교, 안보, 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북·대러 관계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재명 식 줄타기 외교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함을 드러냈다

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모호하게 합의한 듯하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명하며, 지난 7월 정제유 약 3만 톤이 러시아로 수출된 사례를 지적했다.”(<파이낸셜 타임스>, 9월 28일 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연료 부족을 겪는 러시아를 한국이 도운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그 뒤 8월에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북극항로를 통한 시험 항해를 했다.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북·대러 관계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재명 식 줄타기 외교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함을 드러냈다.

국힘은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문제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 송환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힘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등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말라.

김인식

가자 학살 3년

서방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는 국제 공동 행동

10월 11일 서울에서도 함께합시다

10월 7일이면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학살 전쟁을 시작한 지 3년이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가 '휴전'을 주선한 이후에만 가자에서 1,417명이 죽고 4,964명이 다쳤다(9월 27일 현재). 9월 16일에는 지난해 피격 당한 뒤로 기울어 있던 6층 건물이 무너져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21명이 죽었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공격을 더 강화했다. 때로는 이스라엘군이 앞장서고, 때로는 무장한 시온주의 정착민들이 군경의 비호 아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올해 1~8월 정착민 폭력만 1,600건이 넘는다. 올해 서안에서 죽은 팔레스타인인이 100명을 넘었고(9월 8일 기준), 네댓 명 중 한 명이 어린이다. 그 결과 2023~2025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스모트리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유대·사마리아 [서안지구에서 전쟁을 벌여, 가자에서 한 것을 거기서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도 전쟁을 확대해 4,000명 이상을 죽였고, 지금도 레바논 남부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종학살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동 행동이 10월 10~11일 5개 대륙, 20개국에서 벌어진다.

생존자와 순교자

미국에서는 최근 유엔 총회에 네타냐후가 참석한 것에 항의해 뉴욕 유엔 총회장 바깥에서 수천 명이 행진했고, 100명이 넘게 연행됐다. 거기에는 배우 수전 서랜던, 이라크전 학살 영상을 폭로한 첼시 매닝 등의 유명 인사들도 있었다.

10월 10일에는 팔레스타인청년운동(PYM)이 '인종학살을 멈춰라, 생존자

와 순교자와 땅을 위해'를 내걸고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연다.

영국에서는 10월 10일 런던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전국 행진'이 열린다. 5월 16일 나크바 행진에는 약 10만 명이 참가했었다. 이런 압력에 밀려 영국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금융 제재,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인종학살) 규정은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은 계속 탄압한다. 그래서 운동 측은 전국적인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8월 말 이스라엘과 30억~50억 유로짜리 '아킬레스 방패' 방공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분노가 크다. 인종학살 지지에 대한 분노가 끔찍한 간죽으로 인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울분과 결합되고 있다. 10월 10일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은 아테네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행진하며 인종학살 중단과 함께 "폭탄 대신 일자리와 임금 인상" 구호도 외칠 예정이다.

같은 날 이탈리아에서도 로마·밀라노·나폴리·토리노 등 "이탈리아의 모든 광장"으로 나오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탈리아 정부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반유대주의라고 공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집회 주최측은 인종학살 중단, 무기 금수, 법안 철회, 팔레스타인 정치범 7명 석방 요구를 내걸고 있다.

호주에서는 10월 11일 시드니·멜버른 등 5개 이상 도시에서 이스라엘 제재와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지난해 호주 경찰의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금지 시도에 항의해 30만 명이 다리를 건넌 바 있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반유대주의 왕립조사위원회'를 꾸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옥죄려 한다.

10월 30일에는 노동자 행동도 준비되고 있다. 이탈리아 USB, 그리스 ENEDEP, 프랑스 CGT, 모로코 ODT

등의 노조는 '제2차 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항만·부두 노동자 국제 행동의 날'을 조직해 "40개 이상 항구"에서 "죽음과 파괴의 선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2월의 1차 행동 때 21개 항구의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이스라엘 관련 선박 5척을 막은 바 있다.

모로코 국가는 2020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 국교 정상화를 약속했다. 최근 모로코 정부가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사관 설치와 대사 임명 계획을 밝히자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참전 반대

중동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자국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전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네타냐후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 77개국이 퇴장하거나 불참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자리를 지킨 것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관련기사: 'UN 네타냐후 연설 때 자리 지킨 한

국 — 이재명의 이스라엘 비판이 빈말임이 거듭 드러남']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의 연장선 상에 있고, 한 국군 파병은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10월 11일 한국 집회가 "트럼프의 전쟁 참전 말라"를 함께 내건 이유다.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주최로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팔레스타인 연대와 참전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낼 자리다.

부산·대구·울산에서는 참가자들이 버스를 대절해 참가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네트워크'는 캠퍼스에서 국제 공동 행동을 알리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은 교사 참가단도 꾸리고 있다.

세계 곳곳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하나의 목소리로 거리에 나서자.

김종환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크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40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한계 계속 드러내는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제국주의는 ‘대(大)중동’ [중동·북아프리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캅카스까지 아우르는 지역]을 지배하고자 수십 년 동안 벌였던 쟁투에서 지고 있다.

단명했던 미국-이란 “양해각서”(MOU)가 7월에 파기된 뒤 양측은 무력 충돌을 거듭하며 살바 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 전쟁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깨뜨리려 한다. 그러나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목표는 이 핵심 항로의 통제권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이다.

이란은 트럼프 정부가 계속 조여 온 경제 봉쇄를 끝내려 한다. 바로 지난 주에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란 항공기에 공항 이용을 허락하는 국가는 모두 제재하겠다고 위협했다.

6월 미국 부통령 J D 밴스가 서명한 양해각서는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상당히 띄워 줬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재빨리 내팽개쳤다. 그 때문에 이란은, 미국이 국가 간 협정에 한 서명은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의 말마따나) “[언제든 지을 수 있는] 연필로 한 것”일 따름임을 확신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한 7일간 휴전 제안도 그다지 진지한 제안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와 별개로, 트럼프는 11월 미국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간선거 후 이란과 합의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유엔에서 말한 직후 이란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석에서 트럼프는 이란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회의를 표했고, 중간선거 후 폭격 재개 의사를 참모들에게 표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 참가국들에게 자신이 “그 이슬람공화국을 절멸시킬” 수도 있다고 큰소리쳤고 미국이 서반구 지배를 재확립하고 있다고 으스댔다. 실제로 최근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통제를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지배의 파열음

그러나 이란은 그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다. 이란은 역량이 커지고 있음을 입증했는데, 미군 함대에 첨단 미사일을 쏘아 함대가 더 안전한 해역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내몬 것



사진 출처: Tasnim News Agency

미국은 중동을 잃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

이다. 미국 군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경고였다.

예멘과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동맹들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을 차단해 페르시아만 연안의 에너지 공급망을 더욱 옥죄었다.(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은 이후 다시 열렸다고 한다.)

예멘 안사룰라(후티 — 역사적 운동의 재빠른 진격은 국경을 맞댄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존립에 직접적 위협이었다.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에너지 전문가 헬렌 톰슨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보증하던 세계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아랍 국가들이 송유관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이 이 해역을 통한 해상 운송에 대한 의존을 최대한 줄이려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시절이 달라지는 또 다른 징후는 미군이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는 지독하게 부패한 두 민족주의 정당이 다스리는 이 지역은 1991년 미국의 첫 이라크 전쟁 이래로 사실상 미군의 보

호령이었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라는 소(小)국가의 총리 마스루르 바르자니는 미군 철수가 충직한 동맹을 “수치스럽게” 버리는 처사라고 불평했다.

지난해 미국은 쿠르드자치정부 수도 아르빌에 8억 달러를 들여 거대한 영사관을 완공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 때문에 그곳은 사실상 버려졌다.

런던정경대(LSE)의 이라크 전문가 토비 도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역대 오랜 미국 동맹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믿을 수 없으니 알아서 이란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해게모니 재확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미국에 도전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지배계급이 없고, 강력하고 공세적인 친미 국유가 있다.

서아시아[중동]와 동아시아의 상황은 그와 매우 다르다. 중국이 힘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설령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더라도, 미국은 중동을 잃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Alex Callinicos: Iran war continues to expose Trump's limit' (2026. 9. 28) / 번역 김중환



유대계 역사학자 도니 글릭스틴 에든버러대학 교수 강연 시온주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다음은 9월 19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한 포럼에서 도니 글릭스틴이 한 강연과 청중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글로 옮긴 것이다. 도니 글릭스틴은 유대계 영국인 역사학자이자 반전·반파시즘 활동가이고 최근 《급진적 유대인 전통》(국내 미번역)을 공저했다.

강연을 기사로 신게 허락해 준 ‘팔연사’에 감사드린다. 강연 영상을 ‘팔연사’ 웹사이트(QR코드)에서 볼 수 있다.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한편으로는 가자로부터 인종학살이 생중계되고, 서안지구에서 정착자들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유대인 국가를 표방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일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박해받았고, 그것은 홀로코스트의 참상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홀로

코스트로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됐다. 그 밖에도 성소수자, 로마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실을 어떻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 한다. 1) 유럽에서의 시온주의의 역사 2) 이스라엘 건국 과정과 나크바 3)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의 관계 4) 오늘날의 상황.

주변적이었던 시온주의는 어떻게 득세하게 됐나?

20세기 초부터 살펴보자. 당시 세계에는 유대인이 1,600만 명 있었고, 그 중 1100만 명이 유럽에 살았다. 유럽 유대인의 절반이 러시아 제국에 살았지만, 그들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4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도시에 살았으며,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계급의 일부가 됐다.

당시 러시아는 산업화 중이었고 차르의 지배 체제 전반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주민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통치해야 했다.

1881년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자 유대인들이 원흉으로 지목됐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겨냥한 폭동, 즉 포그롬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래서 러시아 유대인들은 노동자로서 착취당하는 동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았다. 이는 커다란 분노와 저항을 낳을 잠재력이 있었다.

1897년 한 해에 세 가지 상이한 흐름이 형성됐다.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였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 함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또 다른 흐름은 유대인 노동자 조직인 분트였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자

신만의 조직을 만들었지만 역시 비유대인들과 함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세 번째 흐름은 시온주의다.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박해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온주의는 제국주의의 시대에 등장했고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민족주의를 모방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온주의에는 영토가 없었고, 지지자도 극소수였다. 노동자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나 분트를 지지했다.

그래서 시온주의의 주창자인 테오도르 헤르츨은 팔레스타인 땅을 확보하기 위해 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술탄에게 접근하고, 포그롬을 자행하던 차르에게도 접근했다. 그러다 독일 황제 카이저와 교황을 거쳐 결국에는 영국 제국주의의 지원을 구했다.

그러나 시온주의는 매우 취약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수치가 있다. 포그롬 때문에 유럽을 떠난 유대인이 400만 명이었는데, 그중 시온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간 사



이스라엘의 잔혹함은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인종학살 논리 자체에서 비롯한다

람은 27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마르크스주의와 분트주의가 시온주의보다 훨씬 인기 있었다. 그래서 좌파 시온주의가 생겨났고, 이것이 1970년대까지 시온주의를 지배했다. 시온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당시 유대인 대다수가 급진적이었기 때문이다.

시온주의는 이처럼 인기가 없었지만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르크스주의와 분트주의의 토대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연대였다.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소수였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한 뒤 벌어진

일 때문에 이런 연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유대인 난민들에게 문을 닫았다. 유대인 난민들이 급진적 선동가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941년 이후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연합국은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독일과의 전쟁에 쓰이는 어떠한 자원도 유대인을 구하는 데 돌리려 하지 않고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것을 그저 지켜봤다. 오늘날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듯이 말이다.

그 결과, 그전까지 소수의 신념에 불과했던 시온주의가 유대인 압도 다수의 신념이 됐다.

▶ 6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나크바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측면인 이스라엘 건국 과정과 나크바를 살펴보겠다.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온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대부분 유럽의 도시에서 살다 왔다. 재단사를 하거나 직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맞닥뜨린 사회는 농업이 주된 사회였다. 그들은 농사 경험이 없었다. 또한 그들은 유럽의 생활수준에 익숙했다.

아랍 농민(펠라힌)은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남의 농장에서 시간제로 일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들은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하려 했고, 가장 저렴한 노동력은 아랍인의 노동력이었다.

대규모로 유입된 유대인 이주민들은 이들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의 경제를 별도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비슷했다.

인종 분리 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키부츠다. 키부츠는 사회주의 시온주의자들이 이끌었다. 매우 좌파적으로 보이고 사유재산도 없었다. 여러 면에서 매우 진보적인 외양을 띠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정착자들이 만든 것이고 아주 단순한 구조를 내걸었다. “아랍인 노동은 안 된다.” 그들은 시장에서 아랍인 상점들을 부수고, 아랍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다. 영국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빼앗았다. 영국의 정책은 별뿔어 선언에 잘 집약돼 있다. 그 선언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민족적 고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정책은 다른 모든 곳에서 써먹던 낡은 정책과 똑같았다.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였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을 서로 싸우게 했다.

처음에 아랍인 다수는 유대인 난민



1947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왔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난민이 아닌 식민 정착자가 됐다

을 받아들였다. 아랍인들은 이미 수세기 동안 유대인과 함께 살아 왔다. 물론 그 수는 매우 적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아랍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정착자들이 인종 분리 체제를 만들고, 요충지를 장악하고, 키부츠를 건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상황은 달라졌다. 시온주의가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이었다면 가난한 유대인과 가난한 아랍인들의 공동의 적인 지주들,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연대했을 것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에 온 유대인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도착한 뒤 식민 정착자가 됐다. 그러면서 아랍인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시온주의자들은 무장 조직을 결성

했다. 그 무장 조직인 하가나의 창립자 한 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에서 차르 각료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망명한 아나키스트 여성이었다.

1936년 아랍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서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영국과 시온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그 파업을 분쇄했다. 시온주의자들은 영국과 협력해 아랍인들을 진압했다.

테러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 제국주의가 기진맥진해지자 시온주의자들은 영국에도 맞서기 시작했다.

영국은 여전히 아랍인과 유대인을 서로 견제시키려 했고, 그래서 유대인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다. 무장 조직

슈테른의 일원인 메나헴 베긴이 킹 데이비드 호텔을 폭파한 것이다. 슈테른은 무솔리니와 그의 방식을 본받으려 했다.

이제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이른바 ‘독립 전쟁’을 살펴보겠다. 사실 그것은 독립 전쟁이 아니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 70만 명과 유대인 50만 명이 있었다.

시온주의자들이 나크바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와 맺은 관계다. 그들은 사실상 소련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무기를 공급받았다. 체코산 무기가 시온주의자들의 주요 무기 공급원이었다. 이것은 서방뿐 아니라 냉전의 다른 진영인 소련도 중동을 통제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크바가 벌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랍 지배자들이 아랍인 동포를 돕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미약했다. 그래서 나크바가 벌어진 것이다.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스라엘은 정착자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청소를 통해 1948년에 수립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똑같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아랍인 노동, 즉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났고 세계 최대의 난민 집단이 됐다.



1948년 나크바로 팔레스타인인 70만 명 이상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경비견이 됐다

팔레스타인 해방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팔레스타인 운동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이 운동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팔레스타인인들은 억압받고 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달리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다. 이스라엘 노동계급 사이에서 희망을 찾을 수도 없다. 이스라엘 노동계급은 인종학살을 지지한다. 아랍 지배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이른바 ‘국제 사회’, 즉 세계 지배계급들이 ‘두 국가 방안’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아랍 노동계급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2010~2011년 아랍 혁명 때 라파 국경이 개방되는 광경을 목도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희망은 세계 노동계급의 다수에게 있다. 여론 조사를 보면 시온주의와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가자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여론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우리가 자국 정부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들은 말로라도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혁명이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하겠다. 제1차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등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적은 국내에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려면 자국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팔레스타인 운동이 성공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인종학살과 인종청소, 인종 분리 체제에 맞서 연대가 승리할 수 있다.

▶ 8면으로 이어짐

제국주의의 지원과 끝없는 전쟁

이 대목에서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다. 이스라엘이 수립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다.

딱 건국된 이스라엘은 여전히 취약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같은 아류제국주의가 아직 아니었다. 힘을 키우려면 제국주의에 이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제국주의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스라엘은 독일과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독일은 “이제 홀로코스트는 과거 지사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옛 나치들이 독일 정부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가림막 구실을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오늘날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1956년 이스라엘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침공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려 했다. 그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 전쟁에서 여러 아랍 국가의 군대가 완패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아류제국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와 서안지구로 영토를 확대하고 중동에서 지배력을 행사했다.

오늘날 세계 최대의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 됐다. 그 이유 하나는 명백하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 지역을 통제하

기 위해서다.

이는 이스라엘 정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해야만 존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중은 자국의 군사력과 일체감을 느낀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치의 우경화를 낳았다. 1970년대부터 노동당식 시온주의가 줄곧 쇠퇴하고, 테러리스트인 메나헴 베긴이 이끄는 리쿠드당이 집권했다.

우경화

그리고 상시적인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다. 1973년에는 욀기푸르 전쟁이 있었다. 1979년 이란의 샤 정권이 몰락한 뒤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의 핵심 중동 기지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그 뒤 1982년에 레바논 전쟁이 일어났다(그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가자를 공격했고 그 공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상시적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바깥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스라엘 인구는 증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인종차별적인 사회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최상층에는 백인 유럽인들이 있다. 그 아래에는 미즈라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나라 출신 유대인들이 하층계급으로 있다. 그 아래에는 에티오피

아 출신 흑인 유대인인 팔라샤가 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이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 문화를 대표하지 않는다. 새로운 제국주의 문화를 대표한다. 이를 보여 주는 사례가 언어 문제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 대부분은 이디시어라는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디시어나 아랍어, 에티오피아계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스라엘에 온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했다.

이처럼 군국주의가 심해지고 우경화가 심화됐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대중은 갈수록 제국주의와 인종학살을 지지하고,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등 온갖 끔찍한 일들을 지지한다. 벤그비르와 스모트리치를 지지하는 가장 우익적인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착취받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유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 내고 있다

토론 정리

많은 질문에 감사를 표한다.

첫 번째 질문은 마르크스주의와 분트주의가 어떻게 싸웠느냐는 것이었다. 시온주의자들은 도망칠 것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분트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분트에는 '도이카이트(Doikayt)'라는 훌륭한 말이 있었다. 이것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에 있음'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차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당신이 소수자라면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와 함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변의 노동계급과 함께해야 한다.

나중에 분트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분트주의자들이 같은 혁명 조직에 속해 차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또 다른 질문은 우익 시온주의와 좌파 시온주의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 차이는 매우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크바를 자행한 것도 노동당식 시온주의였다. 1956년 수에즈 전쟁과 1967년 전쟁을 벌인 것도 노동당식 시온주의였다.

우익이 집권한 뒤의 차이라면 아마 팔레스타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정도일 것이다. 전면적 인종학살을 통해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아랍



팔레스타인 해방의 희망은 국제적 연대 운동에 있다

인들을 억압하고 계속 쫓아내면서도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을 것인가?

민족주의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다. 모든 민족주의는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의 공통된 무언가가 계급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는 억압하기 위해 단결하자는 것이다.

민족주의

반면 피억압 민족의 경우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앞서 지적됐듯이 이것이 팔레스타인 운동의 정치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노동계급의 투쟁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승리하려면 아

랍 노동계급과 세계 노동계급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질문이 나왔던 레닌과 분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것은 흥미로운 문제다. 20세기 초에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분트주의자들은 함께 활동했다. 그러나 1903년에 그들은 갈라섰다. 분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계급 정체성보다 유대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유대인 해방의 위대한 순간에 분트는 혁명의 바깥에 있게 됐다. 러시아 혁명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부여했다.

분트는 분열됐다. 분트주의자 대부분이 분트를 떠나 공산당과 러시아 혁명에 합류했다. 이것이 민족주의,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민족주의조차 갖는 한계를 보여 준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언어 문제에 관한 질문도 답해 보겠다. 우선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의 55퍼센트가 이스라엘에 산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언어 문제를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히브리어는 기독교의 라틴어처럼 죽은 언어였다. 죽은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1890년대에 되살린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억눌린 것은 이디시어만이 아니다. 이스라엘로 온 아랍계 유대인들의 아랍어와 그들의 문화도 억눌렸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향유해 온 옛 문화들의 시

신 위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유대인인가'라는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동화된 유대인이라는 범주가 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유대인도 있고, 비종교적 유대인도 있다. 좌파 유대인도 있고 우파 유대인도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상이한 정체성들 사이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차이에 관해 언급하고 싶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빼앗은 땅 위의 빼앗은 집에서 살면서 인종학살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몇 가지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이다. 여론 조사를 보면 미국 유대인이 일반 미국인보다 이스라엘에 반대할 가능성이 네 배나 높다. 세대별 차이도 크다. 젊은 층일수록 팔레스타인인을 지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한편, 독일에서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다 유대인 혐오라는 죄목으로] 기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비유대인보다 125배나 높다.

그래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말은 비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편이냐다.

녹취·번역 이원웅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문의: 02-2271-2395

가입하세요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이란 전쟁과 한국의 참전 문제
- ▶ 인공지능(AI) - 희망, 거품 혹은 재앙?
-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 팔레스타인인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내란세력’과 그 ‘방패’ 조희대, 이재명 지키기로는 막을 수 없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정부 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찢쩍대는 모습을 연휴 내내 보여 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올해 3월 대법관 한 자리가 빈 뒤로 200일 넘게 후임 제청을 미루던 조희대는 8월 18일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었다.

다분히 의도된 듯한 시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이튿날이자 여권의 분열이 절정에 달한 때였다. 장동혁은 ‘올공’ 시위에 현역 의원 18명과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하며 기세를 높였고 곧이어 반대파 의원 4명을 윤리위에서 징계하며 장악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조희대가 정상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들의 제청을 미루는 사이, 그 부하들은 추천된 인사들에게 사퇴 의사를 묻는 개별 연락을 취했다. 법 기술자답게 헌법과 법률의 여백을 이용해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대법관에 임명하려고, 청와대와 조율하던 관행도 깨며 도발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면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동시에 자기 재판을 피하려고 대법관을 고른다는 극우의 공세에도 방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희대의 제청요구 거부 이후 9월 28일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주문했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2025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배당 9일 만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관련 기사: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도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낙인을 찍어 둔 것이다.

그래서 극우에게 이런 대법원장은 방패이자 무기가 돼 왔다. 국힘은 재제청 거부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추어올렸다. 장동혁은 같은 날 이

재명에게 스스로 물러나든 국민이 끌어내리든 할 것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지방선거 이후 세력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여권 분열을 격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극우는 ‘올공’ 시위 등 기층을 동원해 사기를 높였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며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이 차기 총선 공천권(당대표 선거)과 맞물려, 여권 내분이 격화됐다.

반면 장동혁은 사퇴 압력을 받던 처지에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여유 있는 태도로 국힘을 진두지휘하는 자로 자리잡았다. 거리 시위와 제도권 내 책략이 서로를 강화하는 역학이 작동했는데, 장동혁 자신이 이를 연결하는 구실을 톡톡히 했다.

자신감뿐 아니라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한 국힘은 파상공세를 펴며 지금은 우크라이나 포로 입국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은 ‘내란 청산’ 재판과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도 가를 수 있는 승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를 막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여러 차례 조희대 탄핵을 거론해 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당 대표 김민석은 8월 20일 “조희대 씨는 이미 충분히 탄핵당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올해 3월 25일 범여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고 밝혔다.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긴 숫자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소추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는 ‘역풍’을 우려해 못하고 취임 후 지지율이 높던 때에는 괜한 평지풍파로 정국 안정을 해칠까 봐 못하고, 이제는 실패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봐 못 한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조희대의



조희대와 국힘의 공세에 이토록 취약해진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해, 권한쟁의심판에도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이 자신 없음은 민주당의 근본적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노선 모두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극우를 막겠다고 하지만, 계급 지배 질서를 지키려는 목표는 극우와 공유하는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의 쿠데타 직후부터 내세워 온 ‘국가 정상화’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쿠데타에 가담한 국가기구들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가기구의 한 축을 크게 흔들는 일 앞에서는 늘 한 걸음 물러선다.

그런 식으로 지배계급과 이른바 중도보수층의 신뢰를 얻으려다 지방선거도 실패했고,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해졌고, 얼마 못 가 내란 청산 ‘피로감’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니 쿠데타 세력에게 관대했던 사법부 지휘부를 건드릴 명분과 동력도 스스로 줄어들었다. 조희대 탄핵 카드가 말로만 나오는 이유다.

이런 노선은 정치 일반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ARS 여론조사(9월 22~23일)에서 국민의힘은 39.4퍼센트로 민주당(38.7퍼센트)을 앞섰다. 조사기관은 민주당 인기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에 따른 40대 이하와 중도층의 이탈을 꼽았다. 중도보수를 붙잡으려고 머

뭇거렸는데, 그 머뭇거림이 기존 중도 지지층마저 떠나게 하고 있다. 그 사이 극우는 대통령 재판을 다시 열라고 공개 요구할 만큼 대답해졌다.

그런데도 주요 좌파는 이런 극우에 맞서는 데서 민주당과 공조를 하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더 나아가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이런 공동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 특히 아래로부터의 동원을 그런 공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킬까 봐 무서워서이고, 이 소심함은 자신들의 노선과 계급적 기반 때문이다.

극우와 그들의 가장 효과적 무기인 조희대를 좌절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민주당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중 자신의 급진적 행동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 확장 노선은 내란 청산에서뿐 아니라 노조법 후퇴, 이란 전쟁 파병 검토, 국가보안법 수사에서도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노동계급과 좌파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극우에 맞서는 과제가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운동으로 좁혀지면, 극우에 맞설 힘은 오히려 그만큼 줄어든다.

장호중

‘진보’(중도좌파) 개혁 정부가 극우 저지에 실패함을 보여 주는 브라질 대선

10월 4일 1차 투표를 앞둔 브라질 대선은 지독한 기시감을 준다.

룰라는 전 대통령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아들이자 정치적 계승자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소수점 아래에서 지지율 접전 중이다.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룰라 취임 일주일 만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며 쿠데타를 기도했다. 가담자 1,40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자들이 정권 재탈환을 위협하는 현 상황의 책임을 룰라는 트럼프에게만 돌린다. 지난주 유엔 연설에서 룰라는 대선 “외부 개입”을 규탄하며 “국민주권” 수호를 다짐했다.

물론 트럼프의 중남미 간섭은 노골적이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부부를 납치한 일은 중남미 극우에게 전진 신호가 됐다. 이후 트럼프는 콜롬비아 등지의 대선에서 극우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를 백악관에 초청하며 공개 지지했고, 보우소나루는 자신이 당선하면 트럼프가 꾸린 중남미 우익 정부 모임 ‘자유방패’ 가입을 약속했다. 미국 극우 마가는 보우소나루 세력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브라질 성령운동과 그리스도교(개신교와 가톨릭)의 강력한 후원자다.

그러나 미국의 간섭은 전능하지 않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타국 정권 교체 시도 중 성공한 것은 39퍼센트인데, 그중 절반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정권이 교체됐을 법한 경우였다. 간섭보다 중요한 변수는 해당국 내부 상황이었다.

룰라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동시에 우익과의 협치를 추구했다.

취임 직후 룰라는 보수 정당인 민주운동당(MDB), 브라질통합당, 사회민주당(PSD) 인사 아홉 명을 내각에 포함시키고 기획예산부 등 요직을 할당했다.

MDB는 2016년 노동자당(PT) 정부 탄핵(의회 쿠데타라고 할 만한)을 주도한 당이고, 브라질통합당은 보우소나루의 정당과 1970~1980년대 군부

독재 후예들의 정당이 합당한 정당이다(PT는 그 독재에 맞선 대중 파업 물결 속에서 창당됐다). 이 당들은 올해 5월 국회에서 서로 담합해 룰라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쿠데타 가담자 조속 사면을 법제화했다.

협치 강조 속에 쿠데타 수사는 좌초했다. 룰라 정부 하에서 검찰청장에 오른 호르헤 메시아스는 그리스도교 우익과 ‘화해’(사실은 정부 측의 공격 중단)를 주선했다. 수사 과정에서 군수뇌부의 가담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기소된 것은 극소수였다.

룰라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를 통치안정성에 종속시킨 결과, 쿠데타 청산이 우익과의 거래 대가로 지불된 것이다.

우익과의 거래는 룰라 1기 정부 시절부터 PT 정부의 운영 방식이었다. 그 거래는 PT 정부가 특혜를 매대한 부패의 원천이었다. 부패는 PT가 기성 권력층의 일부임을 드러냈다.

PT는 그런 거래를 친서민 개혁 추진의 수단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브라질 복지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1차 산업 호황의 과실 중 극히 일부만을 극빈층 구제에 돌린 것이었다.

하지만 룰라와 PT에게는 그때만큼의 운신의 폭이 없었다. 원자재 호황이 2010년대 초 끝난 후 지금까지도 브라질 자본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룰라 정부는 자본의 수익성 회복을 우선했고, 복지 삭감과 제조업·금융 우대 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 자산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3퍼센트, 자산의 50퍼센트를 갖게 됐지만 서민들은 막대한 가계 부채와 실업에 시달리게 됐다.

이러니 룰라가 대선 외부 개입만 말한 것은 책임 회피다.

언행 불일치

룰라가 트럼프의 협박에 즉시 꼬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그 동기는 미·중 갈등을 브라질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에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브라질과 중국은 모두 브릭스(BRICS) 회원국이지만 양국 관계는 그들이 자처하듯 ‘호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대응해 룰라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대미 협상 지렛대로 이용했다. 그러면서 그 협상을 다시 대중국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는데, 제조업 재건(특히 전기차 생산)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룰라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주권 침해를 비판했지만 그 침해의 결과에 일관되게 도전하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납치를 규탄하면서도 트럼프에 협조한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와 관계를 긴밀히 했고, 쿠바 봉쇄를 규탄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상징적 수준에 불과했다.

언행 불일치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더 두드러진다. 룰라는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인종학살)를 규탄했지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2024년 브라질은 이스라엘산 무기를 최소 1억 6,700만 달러어치 수입했다.

룰라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 경제를 지탱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2024년 브라질의 대(對)이스라엘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1퍼센트 늘어, 그해 이스라엘이 수입한 원유의 약 9퍼센트를 차지했다.(브라질 최대 원유 수출 기업은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다.)

브라질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룰라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했다. 유럽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벌인 2025년 9월 브라질 석유노조는 이스라엘 수출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룰라 정부를 압박하는 행동은 간헐적·일회적 동원 수준에 머물렀고 그 방향은 “룰라에게 연대”해 그에게 힘을 신는 쪽을 가리켰다. 무토지노동자운동(MST)같은 급진 좌파는

룰라를 더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그 비판을 지속적 대중 운동 건설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자기만의 선거 정당 건설로 수렴시켰다.

대중의 쓰라림

룰라 정부의 귀결은 중도 정부가 대중의 염원을 저버리고 극우 부상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방증한다.

라틴아메리카 중도좌파 개혁 정부들이 2010년대 불황에 대응해 노동자 등 서민을 저버린 것은 쓰라림을 자아냈다.

각국에서 극우가 부상했다. 그들은 ‘핑크 물결’의 잔재조차 일소하려 달려들었다. 트럼프의 간섭은 그들을 연결하고 고무했다.

극우 부상은 필연이 아니었다. 극심한 불평등과 서민 생활고, 권력층 부패라는 비슷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대중 항쟁(‘Z세대 반란’)이 분출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반극우 정서는 크다. 하지만 그 염원은 중도좌파 개혁 정부에 대한 응원 부대로 수렴됐다. 위기에서 서민을 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그 정부들은 다시 대중의 쓰라림을 키웠지만, 진정한 좌파적 대안은 미약했다. 극우는 바로 그 정치적 공백을 파고들어 성장했다.

올해 중남미에서 잇따른 극우 집권은 그 패턴의 최신 양상이다.

10월 25일 결선 투표 끝에 보우소나루가 집권에 실패한다면 브라질과 그 너머의 노동자 대중은 안도의 한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룰라의 4년이 자아낸 쓰라림에서 극우는 다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둘과구는, 중도좌파 개혁주의 정치가 보여 준 것 이상을 실천하는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투쟁으로만 열릴 수 있다.

김준효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임신중지약: 보수 의료계 압력 받아 개혁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전주현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을 도입하며 이용에 관한 세부 진료 지침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산부인과학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3개 단체(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환영했다.(9월 16일 공동 성명서)

그러나 정부가 세부 지침 마련을 맡긴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임신중지권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은 임신 10주 이하만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10주 초과 22주 이하는 조건부 허용, 22주 이후는 전면 금지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도 “[임신중지] 건강상 문제가 아닌 개인적 선택에 따른 시술로서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신중지를 당사자인 여성의 결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의료진의 권한과 부담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부인과 3개 단체에는 반낙태 운동의 인사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최안나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임신중지를 단속할 때, ‘낙태 의사 고발’, ‘낙태근절운동’ 등을 주도했고, 현재 반낙태 운동의 핵심 인물의 하나다.

매우 보수적

따라서 임신중지약 이용에 관한 세부 진료 지침도 매우 보수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위기 타개와 지지층 달래기를 위해 임신중지약을 허용하면서도, 산부인과 단체들과 반낙태 세력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임신중지약 이용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의회의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접근을 제한하면 이용자는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 유통 약물에 의존하거나, 비용·이동·거부의 장벽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병원 문턱을 높여 10명의 통제된 복약만 허용하는 대신 90명을 음성적 영역으로 밀어낸다면, 인구집단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별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전문의의 우려를 넘어,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한 경로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입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임신중지약의 접근 문턱이 높아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한 일부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하거나 적절한 의료적 지원 없이 이용하는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역효과는 청소년, 이주·난민 여성, 가난한 청년 등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임신중지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그 약의 실효성도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안전 가이드와 재정 등의 인프라는 이미 마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는 임신중지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대한 국제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사용 가이드도 마련되어 있다. 2025년 발간된 최신 임신중지 가이드에는 임신중지약 자가 복용과 원격 제공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등이 상세히 제시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보수적인 산부인과 단체들의 ‘전문성’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직접 지시”하면 된다.

또한, 임신중지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 의료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임신중지약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건소에서 현재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각종 검사비 등을 무상으로 조건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중지에 관한 제반 비용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면 임신중지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도 조건 없이 임신중지약 무상 지원하라

반낙태 보수·우파는 임신중지약이 청소년의 성을 문란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성을 억압하고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해악적이다.

청소년도 독립적인 성적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성관계 경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의 성관계는 일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과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청소년에게도 현실이다. 2020~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진행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보면, 총 479건 중 65퍼센트(313건)가 청소년 상담이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많은 병원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부모에게 사

정을 말하기 어려운 대다수 청소년들은 성인 신분증을 구입해 수술을 받거나, 음성적으로 비싼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원치 않는 출산에 내몰리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런데도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청소년의 임신중지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청소년이 부모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상담·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신중지약 진료지침에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부인과 단체들의 이런 진료지침을 수용해선 안 된다.

임신중지권은 청소년에게도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 자신의 요청만으로 임신중지약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다시 지뢰밭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9월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로 수색대장과 공병 중사가 크게 다쳤다.

이들은 육군 25사단 소속으로 18명이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새 수색로를 내던 중이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 설명을 보면, 그곳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수풀이었다.

합참은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고, 최종 판정이 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내내 공세를 폈다. 장동혁은 정부가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 “구속”을 거론했다. 최근 그 폭을 넓히고 있는 대정부 공세에 좋은 소재를 잡았다는 기세다.

국힘은 대북 확성기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북한에 사죄를 요구하며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장도가 높다는 DMZ에 지뢰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울 게

없다. 수색을 나간 공병들도 지뢰 탐지를 하며 전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왜 ‘평화 구상’을 내건 이재명 정부하에서 비무장지대가 다시 지뢰와 방벽의 전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요새가 된 ‘비무장’지대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국경선화’ 작업을 펼쳐 왔다. MDL 이북에 철책과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고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도 폭파했다. 작업 중 MDL을 넘는 일도 잦아져 9월 초까지 최근 한 달 동안 20여 차례로, 2025년 한 해(17회)보다 많았다.

도로를 끊는 요새화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가까운 행동이다. <동아일보>의 국방 담당 기자는 2024년 10월 칼럼에서 요새화의 배경으로 “북한군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일부 병력 공백이 생긴 틈에 한미동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다는 내부 불안”

을 꼽았다.

북한 지배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상 속 위협이 아니다. 한미 을지프리덤 실드 연습은 기간을 줄였지만, 한미일은 9월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예정대로 치렀다. 북한 외무성은 이 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가장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북·중 관계는 복원됐다. 조·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비핵화는 사라지고 군대 간 교류 강화가 들어갔으며, 김정은은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밝혔다. 대만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미중 대결의 전선에서 북한은 북쪽 최전방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거울에 비친 두려움

남한의 움직임도 같은 논리를 따른다. 군은 2025년 9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번 작전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려는 유엔군사령부와 의 현장 조사를 위해, 지뢰가 묻혔을지 모르는 땅에 길을 내는 일이었다. 그 길은 계획보다 MDL 쪽으로 더 나아갔다고도 한다.

북한군이 MDL을 넘을 때마다 군은 대부분 경고사격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도 사고 뒤 보수 언론과 국힘은 흔적을 찾고도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오히려 더 일찍 들어가지 않은 것을 탓한다.

이처럼 남북 양쪽은 데칼코마니 같다. 상대의 요새화는 공격이고 자신의 대응은 방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경선을 지키는 것은 안보의 기본 중 기본이다”라고 썼다. 북한의 두 국가론처럼 남쪽 권력층도 그 선을 국경선이라 부르며 지키자고 나선 것이다. 유승민은 여기서 더 나아가 “더 강력한 ‘국경선 요새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구조 안에서 중도를 걸으려 한 이재명 정부의 ‘평화 구상’은 1년도 지나지 않아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다.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뒤 박근혜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열흘 만에 남북이 DMZ에서 포격을 주고받았다(본지 155호). 지금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당시보다 더 첨예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 크게 다친 것은 두 명이었지만, 좁은 길에 함께 있던 18명 전원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퇴원한 15명도 상태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 심리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조사 때는 사고 당시 병력이 다시 그 지뢰밭에 들어갔다.

‘상응 조치’가 또 다른 상응 조치를 부르며, 다음에 그 길에 들어설 사람도 장군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사병들이다.

장호중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해외 마르크스주의 학자 초청 강연

미국의 쇠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열리는가?: 중국의 부상, 모순, 그리고 저항

일시 9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에이드리언 버드 런던사우스뱅크대학교 객원 연구원, 전 사회과학부교수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서울 지역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